"'사적채용' 대통령실, 지인 직업소개소 전략"

민주 "도 넘어섰다" 공세 강화

청년 공시생들 박탈감 불 지펴

대통령 사과 촉구…"명단 공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안보문란, 인사문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신색깔론'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이른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불을 지피며 역공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의 북송을 끄집어냈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 없이 신색깔론을 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국민들은) 선관위원장인 우 사장이 아들 명의로 고액 후원을 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뿐 아니라 (우 사장 아들이) '아버지 찬스'와 1,000만원 후원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잇따른 사적채용 논란에 대한 진상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 시작은 사적채용 논란의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곳에서의 인사 채용이 공사 구별을 못 하고,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과 얼마나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는가가 (인사) 기준인 듯하다"며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가세했다.

당권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만약 제가 저희 지역 선관위원 아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청와대에 채용시켰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대통령실은) 곳곳에 이해상충"이라고 꼬집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매우 큰 내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전 정권 청와대와 현 정권 대통령실의 채용 명단을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송갑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 공시생들의 박탈감에 불을 지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지인의 직업소개소로 전락시킨 국가적 망신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빈손

과방·행안위 입장차 확인

여야는 19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과방위와 행안위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장 중재안이 없다"며 "(민주당의 양보안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기존에 자기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 저희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오늘 따로 (회동) 계획이 잡혀있진 않고 언제든지 의장께서 보자고 하면 저희야 만남을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연합뉴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제물

국힘, 탈북어민 북송 맹비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흉악범이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이 애당초 귀순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들은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송현장 영상 비교 방안과 관련, 권 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한 NLL 수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표류로 인해 남한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북송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 동영상이 확보되면 비교해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코로나 중증 위주 관리에 만전"

"반도체 인재양성 집중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3,582명을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7,347명)의 1.97배로 3만6,235명 늘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이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거론하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관계 기관에선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응 방안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관계 당국이) 힘 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BA.5' 국내 코로나 우세종

정부 "거리두기 최후 수단"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코로나19 우세종이 됐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2주(10~16일) 국내감염 BA.5 검출률은 47.2%로 전주(23.7%)보다 23.5%포인트 급증했다.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본다. 지금의 증가 추세면 BA.5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유입 중 BA.5 검출률은 7월 1주 70.0%에서 7월 2주 62.9%로 내려갔지만,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BA.5 검출률은 52.0%로 이미 우세종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성이 강한 BA.5는 지난 5월 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된 이후 8주 만에 50%에 가까운 검출률을 기록하며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방대본은 복수의 연구팀의 유행 전망을 종합해 다음 달 중순에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11만~20만명), 다음달 중순이나 말에 하루 확진자 20만~28만명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했다.

BA.5 주도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BA.2.75로 인한 유행 확산으로 '쌍봉형 유행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통제적 방역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